

고령사회의 도래와 정책방향



김 용 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한 국사회는 고령화의 물결 속에서 힘든 항해를 해야 하는 시대를 맞고 있다. 전체 인구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00년에 7%에 도달하여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고, 현재는 약 10%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가속화되어 2018년에는 14%인 고령사회,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전망이어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인구고령화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급속한 인구변동으로 나타날 각종 경제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왔다. 2001년도에 국무총리실에 노인보건복지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기본대책안을 발표한 바 있고, 2003년 10월에는 대통령정책실에 ‘고령사회대책 및 사회통합기획단’이 발족되었으며, 이는 2004년 2월에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로 확대 개편되어 다양한 고령화대책을 수립하였다. 2005년 9월에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의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동법에 근거하여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우리나라의 고령사회 도래는 평균수명의 연장과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에 기인한다. 평균수명의 연장은 건강수명의 연장이 뒤받침된다면 인류의 꿈이 실현되는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고령사회도래 원인은 낮은 출산수준으로 인한 측면이 강하며, 어느 사회보다도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에 도달한 1983년 이래 지속적으로 합계 출산율이 저

하되는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내년에는 20~54세 연령층 인구가 절정에 도달하고 그 이후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어 인구고령화는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고령사회에서는 무엇보다도 노동력의 부족과 노후 생활보장의 재원조달이 그들에게 불안을 야기시킬 것으로 보인다. 노동력의 부족은 현역근로자로 하여금 고령자를 위한 사회적 부담부담을 가중시키게 될 것이고, 노후 공적소득보장 등의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이 요구될 것이다. 아울러 소요재원에 대한 확보가 결코 용이하지 못한 현실을 감안한다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성과를 올릴 수 있는 부문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적정한 자원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선택과 집중’의 어려움도 있다.

한국 사회의 위협요인이 될 고령사회에서는 안정적 경제성장, 세대통합, 사회양극화 해소 등이 중요하며, 무엇보다도 젊은이와 노인이 함께 공존하는 사회문화를 어떻게 조성하고 유지 발전하느냐에 고령사회 적응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보겠다.

궁극적으로 고령화 대책의 기본적인 정책방향은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건강하면서 통합적인 경제·사회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환경기반을 조성하는 것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적 피부양자들을 위한 각종 부담문제에서 발생하는 사회구성원 간의 이해갈등을 축소시키고, 사회적 통합을 이룩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회양극화의 해소’를 위한 노력도 뒤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또한 중·고령자 스스로가 사회에 의존하지 않고 생

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방안, 가족, 기업, 비영리단체(NGO 또는 NPO) 및 지역사회 공동체가 중·고령자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상호 협조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방안, 중·고령자가 생활하고 있는 지역의 행정주체가 지원해주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사회정책의 방향에서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고령사회를 받아들이는 자세라 하겠다. 즉, 젊은이와 노인이 함께 공존하는 사회문화를 어떻게 조성

하고 유지 발전하느냐에 고령사회 적응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보겠다. 노인을 사회의 어르신, 집안의 어르신으로 존경하는 문화, 바른 사회를 이끌어가기 위해 젊은이들을 선도하고 지도하기

위해 헌신하는 어른문화, 그리고 미래성장 동력인 아동들을 보살피는 동네 어른들의 모습은 성숙된 세대통합적 사회문화의 조성이 가능한 아름다운 한국사회의 미래상임에 틀림없다.

고령사회에 대하여 고민하는 장(場)을 열면서 이번의 논의가 ‘고령사회의 도래’라는 ‘위기’를 극복하고 ‘기회’로서 승화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그러므로써 한국 사회의 미래는 새로운 도전과 함께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